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124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32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135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151



한미 연합방위지침 서명식(2018년 10월)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유지·강화하면서 모든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미는 양국의 전략적 자산과 군사적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의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65년간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경제발전에 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미 정상은 2017년 6월 정상 회담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는 양국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¹⁾,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²⁾,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³⁾ 등 다양한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통해 양국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검증·조율하고, 주요 동맹현안들을 해결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5월 최초로 개최된 이래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동맹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결과 1978년에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한미군사위원회회의도 설치함으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한미안보협의

-
- 1)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외교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간 최고 안보협의체(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2) 양국 합참에서 연계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 3) 다양한 한미 국방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연합군사령부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8년 10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략문서⁴⁾에 합의하였다. 한미는 2019년도에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⁵⁾) 평가를 시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하면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⁶⁾에서 한미동맹 만찬을 개최하여, 굳건한 양국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항구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는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안보 사안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범위 면에서도 사이버·우주·방산·과학기술·해양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 동맹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

4) ①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지침’, ②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③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④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

5)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6)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 원본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곳. 미국 전역에 2개의 보관소, 12개의 지역기록보관소, 13개의 대통령도서관, 1개의 인사기록센터를 운영하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14년 9월 우주상황 인식 정보공유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주상황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으며, 2017년 9월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TTX⁷⁾)을 개설하여 위성통신·항법 장치에 대한 재밍 시도와 같은 공동의 우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 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도 한미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⁹⁾), 방산기술보호협의체(DTSCM¹⁰⁾), 안보협력위원회(SCC¹¹⁾), 군수협력위원회(LCC¹²⁾) 등 다양한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맹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전·평시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연습·독수리(FE)훈련 등 연합연습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해 왔으며, 대잠수함전 훈련, 탐색·구조 훈련, 한미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¹³⁾ 등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켰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었

7) Table Top Exercise

8)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9)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10)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1)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12)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13) 대규모 공격편대군 임무계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을 때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달성한 바 있다.

2018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써 일부 엄선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유예 또는 조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미는 양국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단독 및 연합훈련은 지속 시행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 시까지 용산기지 내에 잠정 유지하기로 하였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국방부 부지 내에 조기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국방부 부지 내 이전은 한미 공



F-15K, B-1B, F-35B 연합훈련(2017년 6월)

조와 연합방위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용산기지의 반환을 가속하여 용산공원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진전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정책, 전략, 전술 등 모든 수준에서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 주한미군기지 이전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지이전계획(YRP¹⁴)’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¹⁵)’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미국 측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대별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 Yongsan Relocation Plan

15) Land Partnership Plan

용산에 있던 미8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 부대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보다 안정적인 주둔 여건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지 이전 사업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점차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전과 기지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¹⁶⁾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¹⁷⁾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다.¹⁸⁾ 2018년 현재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¹⁹⁾

16) SOFA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17)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8)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 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는 중

19)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5~2018년 분담금 총액은 매년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총액과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고려하여 결정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의 100%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군수지원비의 100%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도표 5-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단위 : 억 달러

차 수	1·2차					3차			4차			5차		
	연도(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액 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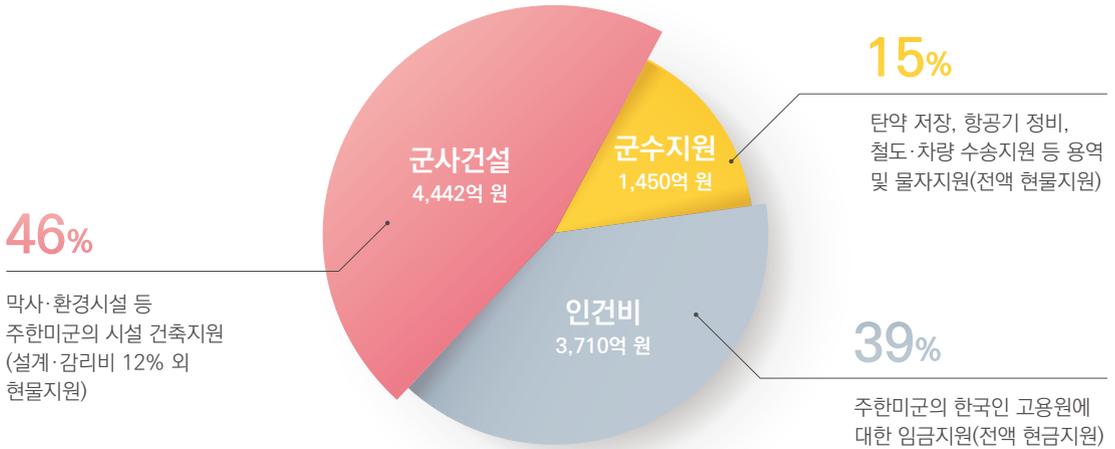
단위 : 억 원

차 수	6차		7차		8차					9차				
	연도(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액 수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도표 5-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

2018년 기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28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제8·9차 협정을 거치면서 방위비분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제10차 방

위비분담협정을 통해 투명성, 상호존중과 호혜성, 제도적 합리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방위비분담금 배정과 집행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²⁰⁾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항목 구성과 규모도 변화해 왔으며, 평택기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추산할 경우 2015년 기준 약 3.4조 원에 달한다.²¹⁾

|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 한미는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Friends Forever-영원한 친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9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5회에 걸쳐 약 25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태권도 캠프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였고, 공주, 경주 등 유적지를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대표단과 정부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만찬을 개최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기념하여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KWVA²²⁾), 주한미군전우회(KDVA²³⁾), 장진호 참전용사 모임(Chosin Few), 한국전 참전 기념비재단(KWVMF²⁴⁾) 임원 등 한미동맹 발전에 공로가 큰 미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격려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된 마크 클라크 예비역 대장²⁵⁾을 대신하여 유가족에게 한미동맹상을 수여하였



한미동맹 만찬(2017년 10월)

20) 직접지원은 정부지출을 직접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을 의미하고, 간접지원은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지원을 의미

21) 세부 내역은 일반부록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285p)’ 참고

22)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23)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24)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

25) Mark Clark, 제3대 유엔군사령관 역임, 유엔군 대표로 정전협정 협상 및 체결(2018년 수상)

다. ‘백선엽 한미동맹상²⁶⁾’은 국방부가 2013년부터 매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한 미국 시민에게 수여해 온 것으로, 지난 5년간 윌튼 워커 예비역 대장²⁷⁾,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²⁸⁾, 제임스 밴플리트 예비역 대장²⁹⁾, 존 싱글라브 예비역 소장³⁰⁾, 존 베시 예비역 대장³¹⁾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2018년 10월)

주한미군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영어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들은 태풍 피해 복구, 연탄배달 등 각종 대민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 26)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한미동맹상’을 제정
 - 27) Walton Walker,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의 기틀을 마련(2013년 수상)
 - 28) William Weber,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2014년 수상)
 - 29) James Van Fleet, 미8군사령관으로 한국전 참전, 전후 한국군 훈련체계 정비 등 한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2015년 수상)
 - 30) John Singlab,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크게 기여(2016년 수상)
 - 31) John Vessey, 초대 연합군사령관 역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결정적 역할(2017년 수상)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미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연합지휘구조 및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우리 군의 능력 확보 등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미 양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발전,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등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적극적인 추진

| 연합지휘구조 발전 | 연합지휘구조란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여 양국 국가통수권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의 지시에 의해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방어 및 격멸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지휘구조(안)은 [도표 5-3]과 같다.

[도표 5-3]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새로운 편성안을 적용하여 연합연습을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에 최종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전략문서 발전 |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전략문서를 통해 연합군사령관의 임무·역할과 양국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의 관계를 포함한 연합지휘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엔사 및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을 지속 유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구조를 위해 한미 국방·군사 당국 및 전구급 사령부 간 임무와 역할, 지휘·협조 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연합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 한미 양국은 위기관리 및 공동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지휘구조하에서 한미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³²⁾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확정 이후 우리 군은 포괄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예산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 한미는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바탕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조정위원회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준비 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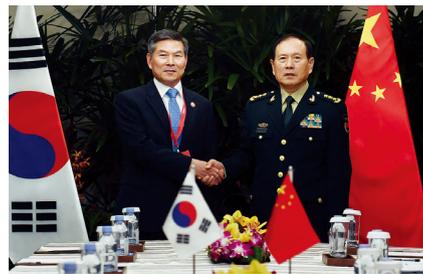
32)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능력임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방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강화

한중 국방교류협력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8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고,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한중 국방장관회담(2018년 10월)

2017년 12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간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양국 간에는 2018년 5월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등 국방교류협력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신뢰 증진은 물론 고위 인사 교류, 부대 교류 활성화 및 공군 방공실무회의의 재개를 통한 공군 간 직통망 추가 개설 추진 등 국방교류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간에는 장·차관, 합참의장 등의 고위급 인사교류와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정례회의, 각 군 간 부대교류, 중국군 유해송환, 군사 연구기관 간 학술회의 및 교육기관의 위·수탁 교육, 체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공중충돌 방지를 위해 2013년 이후 중단된 방공실무회의의 재개를 협의 중이며, 이외에도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재개, 한중 해군 간 직통망

추가설치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수준 및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및 국방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일 국방교류협력 |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의 등 다자간회의를 계기로 장관회담이 지속해서 개최되었으며,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국방장관회담(2018년 10월)

이외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3월에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개최되어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양국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러 국방교류협력 |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11월 정상 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심화시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 당국자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각 군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1994년 체결한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한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따라 양국 공군 간 직통망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국방 전략대화를 계기로 양측은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대화의 수준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공군 간 직통망 설치,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해상 신뢰구축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3차 한러 국방전략대화(2018년 8월)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의 '신북방정책'³³⁾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군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³⁴⁾ 기조에 따라 다원화된 국방외교의 틀을 구축하고 동남아 국가와 실질적 국방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는 역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안보 수요에 부응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호혜적·맞춤형 국방·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개최된 차관급 제6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는 고위급인사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해양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군수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미얀마 양국은 차관급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에는 '신남방협력 추진 범정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동남아 국가와의 국방·방산협력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2018년 1월 말 우리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 풀러톤 포럼(Fullerton Forum)³⁵⁾ 기조연설 참석을 계기로

33)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34)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

35)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 창설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 지역 30여 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참석하는 상그릴라 사전준비 회의 성격의 1.5트랙(정부+민간 참가 회의) 국장급 다자안보협의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을 방문하여 3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 및 태국 총리 등을 예방하였다.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및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인도네시아와는 방산·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18년 만에 성사된 한·태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향후 국방·방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3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의제 논의를 위해 방한한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테러, 해양안보 등에 관한 다자간 공동대처능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자안보협의체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주도하는 데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4월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베트남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 국방협력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호위함 건조식 참가를 위해 방한한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남북정상 회담 성과와 양국 간 국방 현안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6월 초 우리 국방부장관은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협력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2018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차관은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 국방차관과 차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의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12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국방부차관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7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PKO 협력, 유해발굴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KFX-IFX 및 잠수함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뉴질랜드와는 정례협의체 등 군 고위급 인사 교류를 계기로 국방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는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 중,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내 안보정세와 방산협력, 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제2차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심화·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회담 시에는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양국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중 진행된 국방장관 회담, 각 군 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해군 간 내실 있는 연합훈련 등이 양국 간 상호 운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뉴질랜드와는 2017년 2월 제15차, 2018년 3월 제16차 한·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와 2018년 10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연합훈련, 유엔 평화유지활동, 방산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 평가를 통해 국제 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북한 제재의 핵심임에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남아시아 |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는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인도 총리 방한 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인도와 2017년 6월 양국 국방장관 대담을 통해 대북대응 공조, 군사교육교류 및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15년에 합의한 한·인도 외교·국방차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국방정부장관과의 대담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의 중요성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인도 R&D 차관과의 대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8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한·인도 외교·국방차관회의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군사교육 교류, PKO 협력, 방산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군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해, 국방·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공간의 핵심지대이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중부 권역에 위치하는 주요 국가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관통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동되는 등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³⁶)을 형성하고 있으며 독립 이후

36)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5년 4월 「한·우즈벡 군사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매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합동군사대학교 교관요원이 우즈베키스탄 군사 아카데미에 파견되어 작전술 등 군사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등 교육교류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우리 국방부차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우즈벡 국방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교육교류 및 대테러 분야, 방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정부에게 최대한의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는 2013년 12월에 「한·아제르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방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과도 2015년 5월에는 「한·투르크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국방 방산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서울안보대화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교류 및 방산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설했다.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는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소다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2018년 9월)

자협의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국방차관급 회의체이다. 2018년 개최된 첫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차관급 인사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주한 대사가 참석하여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상호 신뢰구축과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방교류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중동 |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980년 수교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아크 부대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는 2018년 3월, 정상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외교·국방 협의체 신설과 함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정상 회담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하고, 국방특임장관과 회담하여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차관이 방한하여 차관급 회담 및 제1차 외교·국방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7년 3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한·이집트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사 교육, 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이집트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개최된 제6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보좌관은 우리 국방부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10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레바논 국방장관, 오만 국방사무총장, 이집트 방산물자장관과 개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제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등 방산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실시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오만 간 국방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동명부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야콥 엘사라프 레바논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7월에는 한·이집트 양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보좌관과 차관급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과 군 고위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유럽·캐나다 | 군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해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3월 개최된 한·핀란드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와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3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프랑스 국제관계전략본부장을 대표로 제4차 한·프랑스 국방전략 대화를 개최하여 2016년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 국방부장관이 프랑스 국방장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국방부차관은 2017년 4월 영국 국방정무차관과 2018년 1월에는 영국 국방참모차장, 2018년 8월 영국 합동군사령관, 2018년 9월 영국 국방정무차관과 대담을 열고 영국군의 6·25 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며 지역 안보정세, 국방·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8년 1월에는 30년 만에 방한한 스페인 국방장관과 한·스페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하였고, 후속조치로 4월에 한·스페인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하고 국방협력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스위스 국방장관 및 라트비아 국방장관과 각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18년 2월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셰그라드 그룹³⁷⁾ 국방차관회의에 우리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여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비셰그라드 그룹 각국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유럽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유럽 국가와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9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방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연맹 대표단과 사이버안보 협력 등 양측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한·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측의 공조를 당부하였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6년 말에 발효된 한·유럽연합 위기관리 기본협정에 따라 우리 청해부대가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제2차 한·유럽연합 안보국방대화를 개최하였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8년 4월 방한한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대담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실질적인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17년 9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제6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나다 국방수석 차관

37)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를 의미하며, 1991년 최초 회의가 헝가리 비셰그라드시에서 개최된 데서 명칭이 유래

보와 대담을 갖고, 2017년 11월 '유엔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캐나다가 세계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면서 양국 해군 간 지속적인 상호방문과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 향상 및 우호증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의 양자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남미 |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7년 6월 정부 합동 중남미 방산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멕시코를 방문하여 해당국의 방산 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와의 방산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2017년 8월에는 멕시코 훈련함이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 차 부산기지에 방문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2017년 10월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콰도르 합참의장과 대담을 갖고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주요국들과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 | 2017년 3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앙골라를 방문하여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군 고위급 교류, 각 군 간 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7월에는 국방부 대표단이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를 각각 방문하여 제1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양자 간 국방교류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우리 국방부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 차 방한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국방차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 국방부 대표단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국방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국방 발전 과정과 경험에 관해 연구하였다.

2018년 9월 서울안보대화에서 우리 국방부차관이 에티오피아 국방차관, 우간다 보훈국무장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티오피아와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군사교육교류, 국제평화활동 협력, 보훈 사업 지원 등 상호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간다 측은 미래의 양국 국방 관계를 이끌 젊은 장교들의 군사교육 교류에 감사를 표하였다.

국방부는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 국방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안보 분야 신남방정책 구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난재해, 테러, 해적, 난민 문제 등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태 지역 내 다자안보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우리 정부 안보정책의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다자안보회의체인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에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무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자안보회의의 참가와 적극적인 안보협력 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안보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양자·3자 등 다수의 개별회담을 개최하여 주요국과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간안보협의체는 [도표 5-4]와 같다.

[도표 5-4]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Track 1 ³⁸⁾ 다자안보회의	Track 1.5 ³⁹⁾ 다자안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포럼(T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안보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풀러튼 포럼

| 서울안보대화(SDD) | 국방부는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38)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39)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 사항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역내 주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전개하여 아태 지역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의 성공적인 발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회 때는 유럽 국가가 최초로 참석하여 20개 국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제3회 서울안보대화에는 남미국가를 포함한 24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고 특히 사이버위킹그룹 회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사이버안보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석하는 ‘동북아소다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방협력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015년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는 30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다자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믹타(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국방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과 지역·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제5회 서울안보대화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에티오피아 차관급 관료가 최초로 참가하는 등 34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비셰그라드 4개국과 ‘한·비셰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과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7년 제6회 서울안보대화에는 4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 협력 비전’이라는 대주제하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기반을 확산하였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2018년 제7회 서울안보대화에는 52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평화 : 갈등에서 협력으로’라는 대주제하에 본회의 1(주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정



서울안보대화(2018년 9월)

착이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사회의 공통 관심사인 동북아 전략균형과 해양안보 협력,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에너지안보와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위협 현안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18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31개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통해 상호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세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서 서울안보대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아시아 안보회의(ASS) |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태 지역의 안보 분야 최대 다자안보회의체인 아시아 안보회의에 200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18년 제17차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 정상 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국방 당국자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참여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국방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매 회 참가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중임을 강조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동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 각각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주변 4국과 국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하여 안보 분야에서 신남방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의 6개 분과회의중 하나인 ‘평화유지활동 분과회의’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캄보디아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와 함께 ‘해양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적극 수행 중이다.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2018년 10월)

|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2017년 서울안보대화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처음 서

을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각국 참가 대표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개최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2018년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 논의를 통해 한·아세안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공감하였다.

|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 국방부는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풀러톤 포럼에 참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 지역 국가 고위 국방 관료 및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와 역내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풀러톤 포럼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다.

국방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2003년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태국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국에서 개최하는 향산포럼⁴⁰⁾에도 매년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이 주요 회원국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활동 강화

| 국제 비확산 활동⁴¹⁾ |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왔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기구,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다자수출통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⁴²⁾ 국방부는 국방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비확산 분야 협약과 국제기구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40) 중국 국방부 주관으로 2014년 출범(2006~2013년까지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민간기관이 참가하는 포럼)되었으며 세계 50개국 국방관료,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5트랙(정부+민간 참가) 다자안보협의체

41)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Non-proliferation)

42) 일반부록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288p)' 참조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군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핵 비확산체제⁴³⁾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⁴⁴⁾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핵공급국그룹(NSG)⁴⁵⁾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확산 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⁴⁶⁾,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⁴⁷⁾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⁴⁸⁾을 제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연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방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확산 우려국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1996년 화학·생물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⁴⁹⁾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다 체계적인 수출통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⁵⁰⁾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확산 통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⁵¹⁾,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⁵²⁾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43)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5년 쟁거위원회(ZC), 1996년 핵공급국그룹(NSG), 1999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차례로 가입

4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 설립, 170개국 가입)

45) 핵물질·기술·장비·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통제체제 쟁거위원회(ZC)와 달리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NSG : Nuclear Suppliers Group, 1978년 설립, 48개국 가입)

46)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생산·비축 전면 금지(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년 설립, 182개국 가입)

47)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으로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97년 설립, 193개국 가입)

4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49)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화학·생물무기 사용 및 제조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AG : Australia Group, 1985년 설립, 43개국 가입)

50)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화학·생물작용제 및 그 제조·장비기술 관련 사항은 호주그룹의 통제사항을 이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호주그룹이 통제 목록으로 규정한 모든 물질을 통제 목록으로 지정. 개정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요구사항을 이행

51)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설립, 35개국 가입)

52)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통제 행동지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을 금지(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2002년 설립, 139개국 가입)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비확산 활동은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왔다. 바세나르 체제(WA)⁵³⁾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⁵⁴⁾, 기술의 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과 통제목록에 합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한 후 자발적으로 이행정보를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에 반기별로 무기 이전 실적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무기거래조약(ATT)⁵⁵⁾은 7대 무기체계⁵⁶⁾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 부품의 국가 간 이전을 통제하는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협약을 비준하였다.⁵⁷⁾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조약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한층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점진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⁵⁸⁾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거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⁵⁹⁾로 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수출허가 시 수출대상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⁶⁰⁾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다.

| 국제 대확산 활동⁶¹⁾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면서, 수출통제 등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

53)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1996년 설립, 42개국 가입)

54) 일반산업 분야와 군사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55)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하고자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ATT : Arms Trade Treaty, 2014년 설립, 99개국 가입)

56)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발사대를 포함

57) 주요 미서명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상태

58)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로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59)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60) 현재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최종 허가는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담당

61)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Counter-proliferation)

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확산 정책이 부상하였다.⁶²⁾ 미국 주도하에 실시 중인 확산방지구상(PSI)⁶³⁾ 등이 대표적인 대확산 조치에 해당되며,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⁶⁴⁾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확산방지와 압류처리 등에 대한 토의식 연습과 해양차단·승선검색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 회의의 서울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2017년)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매년 아태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하였다. 특히 우리 해군은 2014년과 2016년 해군함정과 승선검색팀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각각 파견하여 해양차단훈련 국면에 참가하였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17년부터 대량살상무기 검색팀 일부를 파견하여 한미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참관국 대상 대량살상무기 검색절차 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확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도표 5-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주관 국가 현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 가	싱가포르	한국	미개최	한국 일본	UAE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62)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등을 상정

63)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 간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64) PSI 운영은 21개 주요 회원국들로 구성된 운영전문가그룹(OEG : Operational Experts Group)이 담당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유엔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기준 약 1,0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파병활동⁶⁵⁾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⁶⁶⁾)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4개 임무단⁶⁷⁾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 사하라 공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지금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331명, 남수단 한빛부대 280명과 개인 단위 파병 등 6개국에서 635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도표 5-6]과 같다.

6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 비교

구 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주 체	유엔이 직접 주도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	파견국 주도
지휘 통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파견국 군지휘관
소요경비	유엔에서 경비 보전	파견국 부담	파견국 부담

66)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67) 현재 아프리카에 7개 임무단(서부 사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아브예이, 남수단), 중동에 3개 임무단(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럽에 2개 임무단(코소보, 사이프러스), 남미에 1개 임무단(아이티), 아시아에 1개 임무단(인도·파키스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0여 개 국가에서 약 7만 명을 파견



| 레바논 동명⁶⁸⁾부대 | 유엔은 197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427호가 채택됨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⁶⁹⁾)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에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경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 작전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 와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 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



고정초소 감시활동(2017년 7월)

68)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

69)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7]과 같다.

[도표 5-7]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18년 11월 기준

작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지역 감시정찰 : 36,474회 • 자체 도보·기동정찰 및 EOD(폭발물 처리반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정찰 : 47,456회 • 레바논군과 연합정찰 : 8,714회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108,386회 • 가축 진료 : 33,963두 • 컴퓨터·한글·태권도·재봉 교실 운영 :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 390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군 지원 : 92건

남수단 한빛⁷⁰부대 |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에서 벗어난 수단은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⁷¹⁾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나일강 차수벽 설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또한 남수단 현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기술연구센터 농업, 목공 등 한빛직업학교에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르~피보르 도로 복구공사(2018년 6월)

70)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

71)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1993~1994, 재건지원), 서부 사하라(1994~2006, 의료지원), 앙골라(1995~1996, 재건지원), 동티모르(1999~2003, 치안 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2007~현재, 정전감시), 아이티(2010~2012, 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p>재건지원 작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공항 신터미널(12동) 신설, 편의시설 설치(정화조, 체육시설, 유통고 등) 및 시설 보수(내·외부 진입로, 활주로, 주기장, 울타리 등) • 보르~피보르(197km), 보르~망겔라(125km) 구간 도로 재건 • 보르 지역 도로 보수, 배수시설 개선, 수물 지역 배수 및 복구 장비 지원 • 기반시설(토취장, 쓰레기 매립장 등) 개설 및 유지 보수 • 피보르 마을 진입로(200m) 및 축구장 보수
<p>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글레이주 피스센터 설립 • 보르병원 의약품·물자 지원 • 보르·피보르 지역 초등학교 교육물자 지원 • 존가랑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장 리모델링 • 한빛농장 운영 : 망고·구아바 묘목 350주 식재 • 한빛직업학교(농업 등 7개 분야) 운영 : 556명 수료, 현재 9기 교육 중 • 방한 연수 : 6회차 62명 방한 • 대민 의료지원 : 2만 1,500여 명 • UNMISS 태권도·한국어 교실 운영
<p>난민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도로 보수 및 우기 수물 지역 배수 지원 • 난민보호소 시설보수, 방호벽 보강 및 경계초소(14개소) 신축
<p>UN군 시설공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기지 UN 직원 숙소 설치(12동), 보르공항 경계초소 및 숙소 설치 • 보르기지 방호벽 및 내부도로(4.8km) 보강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피보르 2km, 아코보 200m) 보강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 외부 해자 및 순찰로(1.8km) 보강 • 보르기지 배수로 보수 및 발전기 패드 설치

|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 중이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견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파견된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

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 작전과 경찰 작전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청해부대 302명과 개인 단위 파병 9명 등 5개국에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2018년 11월 기준, 단위: 명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8호⁷²⁾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국내외 선박을 호송하고 안전항해를 지원하며 연합해군사령부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여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과 302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⁷³⁾

72) 1. 청해부대 작전구역 : 남위 11° 이북, 동경 68° 이서, 2. 회원국들의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 파견 촉구, 3. 해적 퇴치를 위해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사용 가능, 4.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5.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는 세계 식량계획(WFP)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73)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대해적작전에 참여 중이며, 일본은 2009년부터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를 대해적작전에 투입 중이며 2014년에는 함정 1척을 CTF-151에 제공하고 2015년에는 CTF-151사령관직 임무를 수행



아덴만
청해부대(홍보
애니메이션)

청해부대는 선박의 요청에 따라 선박을 호송하고, 아덴만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유무선으로 해적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경고하며, 연합해군사와 유럽연합의 협조하에 대해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에는 최초로 유럽연합 대해적작전에 참여하여 소말리아 북부 해안으로부터 해적이 아덴만 해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⁷⁴⁾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에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에서 가나 테마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18년 11월 기준

선박 호송		안전항해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499척	1,807척	15,828척	2,922척	612회(1,827일)	21회 / 31척
안전항해지원					
아덴만 작전(2011년 1월)		선장 및 선원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1년 3월)		우리 국민 37명을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4년 8월)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을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년 4월)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을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2018년 4월)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가나 테마항으로 호송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 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4) 유럽연합 대해적작전(Atalanta 작전)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CTF-465)에서 실시 중인 대해적작전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해부대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

3. 국방교류협력활동

우리 군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협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실종 여객기 탐색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탐색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 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⁷⁵)를 파견하였다.

| UAE 아크⁷⁶부대 |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1진 13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알 아인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5진부터는 15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6년 9월 28일 UAE 총참모부에서 아크부대 이전을 국방부로 요청하여 스웨이한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사 및 이전 비용 320억 원을 UAE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이 소요되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실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육·해·공군의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와 UAE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크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1]과 같다.

75) Korea Disaster Relief Team

76)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으로, UAE 국민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

<p>UAE군 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p>우리 군의 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약조건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시행 • 장거리 사격훈련 및 고공낙하 훈련 시행
<p>국방교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군 주요 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 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 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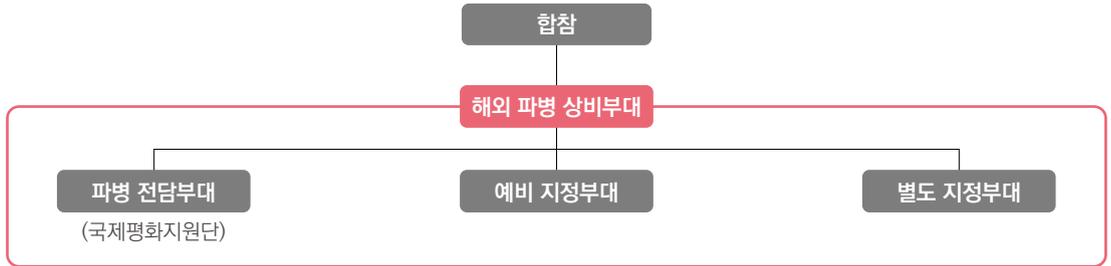
|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은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000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000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와 2,000명의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⁷⁷⁾’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 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다.

77) 전체 또는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유엔을 통해 공병·의무부대 파견요청이 오면 별도 지정부대로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과 파견 인원은 [도표 5-12] 및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2]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



*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헌병, 경비부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무인항공기·헬기부대 등

[도표 5-13] 상비부대 파견 인원

2010년 ~ 2018년 12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계
7,008명(21개진)	1,745명(8개진)	1,791명(14개진)	2,874명(10개진)	13,391명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기능 강화 |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 전담기관으로써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⁷⁸⁾), 외교부 유엔과와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 국제평화활동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엔 군사전문가과정을 유엔으로부터 인증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78)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 인원은 [도표 5-14]와 같다. 또한 2017년에는 유엔 통합훈련처(ITS)와 협조하여 유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Training of Trainer)을 개최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⁷⁹⁾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도표 5-14]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육 인원

2018년 12월 기준

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기 타
7개 과정 1,216명	3개 과정 994명	2개 과정 47명	2개 과정 175명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국제평화활동분과 및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 한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국제평화활동분과⁸⁰⁾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평화활동 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인도에서 실시⁸¹⁾하여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전파하고 국제 사회에 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동시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해양안보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해양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제 사회에 우리 군의 해양안보 역량과 다자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 국제평화활동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 추진 | 우리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 국제평화활동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한·베트남 국제평화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79) 아시아·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차 회의로 회원국(20개국)과 유엔본부 참모장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평화활동 발전 방향을 토의

80) ADMM-Plus 분과회의는 ①국제평화유지활동, ②대테러, ③해양안보, ④군 의료, ⑤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⑥인도적 지뢰 제거, ⑦사이버 분과회의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 1개국과 Plus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 1개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

81) 2016년 인도 푸네에서 실시된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 지뢰 제거 합동 최초 야외훈련(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국 18개국 총 280여 명이 참가)에 국제평화지원단 교관 및 훈련팀 31명이 참가하여 도보정찰, 검문소 운영, 호송 작전, 검색 및 차단 임무 관련 훈련을 실시

였으며, 2015년 12월과 2018년 9월에는 베트남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우리 공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평화활동 파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파견지에서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한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2016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4주 유엔참모과정과 군사 전문가 과정에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관측·감시, 조사·검증, 협상·중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베트남군의 국제평화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3월의 영국 공병부대 남수단 파병을 계기로 2018년 1월, 영국과 한영 국제평화활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제평화활동 관련 정보 공유는 물론 영국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엔참모과정에 장교 1명을 파견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